

##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78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1.

발 의 자 : 이견태 · 임광현 · 조인철  
이개호 · 박지혜 · 주철현  
김승원 · 안규백 · 문진석  
백선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행법에 따르면,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는 수사 · 소추 · 재판의 증거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.

그러나 검찰은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 수사 · 소추 ·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 · 소추 · 재판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고 헌법재판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증거조사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,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그 효용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조회 및 기록송부를 요구할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반드시 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, 재판 · 소추 ·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되, 재판부가 제출받은 기록을 검토하여 심판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즉시

반환하도록 하여,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2조).

##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 본문 중 “있다”를 “있고, 요구받은 기관, 단체는 따라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”를 “기록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여 제출하고, 재판부는 제출받은 즉시 검토하여 심판에 필요하지 아니한 기록은 반환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제32조(자료제출 요구 등)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,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재판·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.	제32조(자료제출 요구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있고, 요구받은 기관, 단체는 따라야 한다. ----- ----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여 제출하고, 재판부는 제출받은 즉시 검토하여 심판에 필요하지 아니한 기록은 반환하여야 한다.